

KBS, 경영개혁으로 공영방송 정상화해야



7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주최로 'KBS의 현주소를 묻는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길'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 주주권을 통한 통제로 경영층과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으나 KBS는 이사회 및 임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모럴헤저드에 대한 억제 시스템이 없다”고 말하며 “이사회 기능 및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KBS의 금융부채 증가 속도가 높아져 2012년 한해만 약 128억 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임직원의 임금상승률은 경영성과와 괴리되어 있고, 고위직급 과다로 인한 인건비 관리의 비효율성이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부 회계감사제를 도입해 회계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기업에 준한 예산 집행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는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만 있고 책임에 대한 공적 통제가 없어 경영실패에 대한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 한 교수는 방송법령이나 정관에 신분보장 조항만 있고 재무적 책임 조항이 없어 방만한 경영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장과 임원, 이사회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관 및 인사규정에 벌칙 조항이 전혀 없는데, 노조가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벌칙이 가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KBS에 ‘약속-실행-책임’과 같은 업무순환 과정을 적용해 공공성 확보와 비용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적이 함께 도모돼야 하며, 공영방송의 수요 감소 추세를 반영해 매출규모 증가를 통제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 감시 견제 기능 잃고 임직원 대변 기구로 전락

토론자로 참석한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KBS사태는 법적으로 불분명한 위상, 상업재원과 공적재원이 혼재된 애매한 경영구조, 공익으로 포장된 구성원들의 자사이기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며 “2004년 이후 네 차례나 추진됐던 수신료 인상 시도에서도 KBS는 상업광고 재원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공영방송에 걸맞도록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KBS는 공기업 특성상 이익금을 당해 연도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는 고질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흑자 규모에 근거해 노사간 급여 인상 합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들어 이사 구성에 있어 KBS출신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사회는 ‘감시-견제’ 기능이 아니라 ‘회사-종사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기구’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KBS의 경영-회계 투명성과, 수신료에 대한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영국의 BBC트러스트나 독일의 방송위원회처럼 별도의 ‘공영방송 규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는 수신료를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서비

스의 대가’로 해석하는 반면, 한국은 ‘TV수상기에 대한 특별 부담금’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KBS입장에서 시청자는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KBS는 내부통제 기능을 상실했고 노사간 권력 투쟁을 위한 정치방송으로 타락했으며, KBS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시키고,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수신료의 독립도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법상 KBS 이사회 설치 운영 사항을 보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있어 구체적인 선임방식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방통위와 대통령만이 관여하는 시스템에서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사 선임과정에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사회를 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독립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KBS의 방만한 경영은 10년 넘게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배구조의 비정상, 경영진-노조 마찰, 조직내 편 가르기는 방송의 공정성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KBS의 경영개혁에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 A A** 이수지 susie@kaa.or.kr

